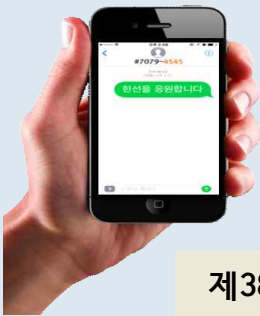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조의 사회적 책임
[발제자] 이승길 한선재단 고용노동정책연구회장
[일 시] 2021년 10월 14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YouTube 한선TV 채널



☒ 문자 후원
#7079-4545

제380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2019년 말 통계로 노동 조합원수는 254만명이고 조직률은 12.5%이다. 대표적인 노동조합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가입비율이 41.3%:40.2%로 민주노총이 한국노총보다 앞섰다. 양대 노총은 세력 확대를 위해 조합원 가입 경쟁은 물론 정부의 많은 위원회에 경쟁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정책 현장에 민주노총 출신들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정치세력이 되었다.

- 노조의 사회적 책임은 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넘어 도덕적, 윤리적, 준법정신까지 포함된다. 도덕적/윤리적인 측면에서 노조 활동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포함하고 조직의 투명한 운영 나아가 준법과 윤리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 포스트 코로나의 대전환기

- ◆ 기후 위기, 디지털 산업전환,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급변하면서 기업 경영 여건과 산업구조, 노동환경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제4차 산업혁명과 AI 혁명이 도래하면서 경제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경제 전반에 걸친 경제 불황에 더하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그나마 버티오던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게 했다. 설상가상으로 시대변화에 부응한 산업구조 전환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나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형 뉴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했지만 결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 전체적인 고용률/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나, 3040대의 고용률이 가장 문제이다. 한국의 3040고용률은 OECD 38개국 중 30위로 매우 낮은 순위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 실직경험이 크게 증가했는데 비정규직의 실직경험은 정규직의 8.9배, 비조합원의 실직 경험은 조합원의 17.5배로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큰 격차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 단념자도 증가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는 결국 불평등,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키우며 위기가구를 증가시킨다.

◆ 노동계 현황

- ◆ 2019년 말 통계로 노동 조합원수는 254만명이고 조직률은 12.5%이다. 대표적인 노동조합 상급단체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양 단체의 노조 가입 비율은 41.3%:40.2%로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앞질렀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보다 6배 많은 조합원 수를 가지고 있음을 내세워 영향력 확대를 위해 위원회 참여 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여러 정책 현장에 민주노총 출신들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세력이 되었다. 또한, 노조 조직률을 보면 민간은 10%인데 비해, 공공노조의 조직률은 70.5%에 이른다. 의사결정에 노동조합의 힘이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노동조합이 정부나 공공부문의 모든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선호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선호되는 것과 같은 노동

시장 이중구조의 문제는 현 정부 기간에 더욱 심화되었다. 노조의 기득권 약화, 노동 시장 유연화, 탈산업화(경제의 서비스화), 글로벌 아웃소싱을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 MZ세대의 노동운동

- ◆ 시대별 노동운동을 보면 1990년대는 대기업 조직근로자, 2000년대는 공공부문, 2010년대는 비정규직이었다. 최근 MZ세대 노동운동은 아직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대기업 사무직 위주의 새로운 노동운동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MZ세대 노조는 기성 노조에 반감을 갖고 있다. 그 이유로 기성노조의 투쟁노동운동, 노조내부의 경직성, 소통이 부족함을 그 이유로 들었다. 공정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신세대의 성향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노동운동에 이들이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 ◆ MZ세대는 기존 노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관망한다.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조에 긍정적이기보다는 과반수가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문제점은 근로환경의 개선보다 정치 사회이슈에 집중하는 노조, 고용세습 등 불공정한 관행, 강경투쟁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 조합가입 강요 및 비조합원을 배척하는 부분을 들었다. 현재 노조의 최대 문제점으로는 이기적, 근로자권익 무시, 또 다른 기득권, 불평등 불공정 등을 들었다.
- ◆ MZ세대가 생각하는 노동조합의 핵심 역할은 1순위가 전체근로자의 권익 개선이었다. 그 뒤로 조합원의 결속력 및 연대 강화, 조합원 요구 관철을 위한 강력한 교섭력 확보, 내부 감사를 통한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 순이다.

◆ 노동조합의 문제점

- ◆ 노동운동은 민주화라는 87년 노동운동 이후의 큰 흐름이 시대가 변한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노동 유연화 정책으로 경영상 해고, 기간제 법, 파견법 등을 제정했으나 그것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유발했다.
- ◆ 양대 노총의 경쟁은 비정규직의 보호는 소홀히 하며 대기업/공공부문, 조직 경쟁에 집중되어 노동운동의 악순환을 가져왔다. 최근 세계적인 좌표는 노동운동의 통합, 강한 조직, 합리적인 노선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계도 개혁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비견될만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 절실하다. 정부의 노조에 기울어진 정책은 노조의 기득권 확대를 강화했다. 기득권과 영향력 확대를 위한 양대 노조의 갈등과 투쟁적 노동운동의 악순환, 세계적으로 퇴조하고 있는 노조정치의 강화는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고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 지급과 같은

비정상적 관행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정규직의 기득권은 낮추고 비정규직의 권익을 높이는 노동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도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야 할 것이다.

- ◆ 홈페이지에 있는 민주노총의 상반기 하반기 직원들에 대한 교육자료를 보면 민주노총에서 어떤 데에 관심을 두고 교육을 시키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노동존중사회/소득주도성장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교섭권 행사를 제약받는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도 주장하고 있다.

◆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 ◆ 패러다임이 바뀌는 문명 전환의 시기에 노조의 역할도 시대변화에 부응해야 한다. 이제는 투쟁적 노동운동보다 근로자들이 시대변화에 부응하면서 평생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직업훈련, 교육 훈련에 관심을 갖고 실행해나가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고용보조법 확대, 공공부문 고용확대, 최저임금 인상보다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용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우선 양대 노총 통합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나아가 노사정사회적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 사회적 책임에 대해 국제표준화 기구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통하여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의 결정과 책임”이라고 정의했다. 이때 ‘조직’은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시민단체, 노사단체도 될 수 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으로는 조합원의 이해 대변, 권익보호 역할을 넘어 도덕적 윤리적 법 제도는 물론 사회적 책임까지 포함해야 한다.
- ◆ 사회적 책임 과제로는 노동분야뿐만 아니라 인권, 지역사회 참여 등이 있다. 도덕적 윤리적 과제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축소, 양극화 해소가 있다. 잦은 파업, 최저임금 인상 등 무리한 요구 납발, 이기적 행동 등의 자제도 사회적 책임 이행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정법상 근거는 없지만 헌법상 노동3권에 대한 보장, 구체화된 노조법이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영역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 ◆ 법 제도적 관점에서 준법의식과 불법에 대해서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조에 기울어진 노동정책이 아니라 노사 균등의 노동정책을 펼쳐야 한다. 노동조합의 재정운영이 투명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의 요구 시 노조 재정에 대해 보고해야 하나 노조 측에서 이에 응한 적이 없다. 노조윤리의 재정립을 통해 노

사와 국민, 소비자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향후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말할 때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기부와 자선구호 활동에도 적극 나섰다 하면 하는 바람이 있다. 지역사회와 경험을 공유하는 등 노조의 자원을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노조의 사회공헌과 봉사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과 포상 등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유발해야 할 것이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